

언론사별 적폐청산기구 명칭 및 주요 활동내역

언론사	명칭	설치시기	특이사항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2018.5.1.	보도 및 인사 부문의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상근위원 4명의 혁신위원회 발족 <u>혁신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다수 근로자나 다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장이 임의로 제정</u> 혁신위는 사원 전체 대상 설문조사 및 이메일을 통하여 이미 정해진 표적 직원들에 대한 비위 조사 실시 이창섭 전 편집국장 대행 해임 등 부국장급 간부 직원에 5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약칭 진미위)	2018.6.5.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당시 KBS 이사 4명은 이러한 규정은 방송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및 감사원 감사통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정에 반대하고 퇴장하였으나 안건 통과를 강행 진미위 규정은 <u>다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함</u>. 기자 14명, PD 2명 등 보직간부 17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징계대상자들을 징계함. (1차 해임처분을 받았던 前 보도국장 정지환은 2차에서는 정직 6개월로 감경, 정직 및 감봉 등 중징계)
MBC	MBC정상화위원회	2018.1.19.	언론노조 MBC본부의 3명이 주요 조사를 담당. 모두 262명을 조사해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이 12명 중 언론노조 소속은 1명도 없음.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은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된 채 조연출, 작가, 뉴스 자료정리 등 한직으로 발령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대법원은 피고(MBC)는 원고(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YTN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2017.12.27.	<u>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 최남수 YTN 대표이사 내정자의 3자 합의. 합의 사항은 (1)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보직간부들의 임원 및 보직 임명 자격 잠정 보류, (2) 경영과 보도 분리, 국장 책임 하에 보도국 독립적 운영 보장, (2) 1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 건 처리 등도 포함</u> 미래발전위원회의 활동으로 정찬형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의 본부장과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보복 <u>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YTN 방송노조는 2022.6.30. 성명을 내고 2018년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파업 불참자’,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 등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정찬형 전 사장등을 고발</u> 특히 미디어연대는 당시 상황을 "YTN방송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장이라는 무게와 노후 준비 등으로 대다수 선배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통을 감내했다"며 "그러던 중 일부 선배들은 지금도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YTN을 '군함도' 탈출하듯 떠났다"고 소개
-----	------------------------	-------------	---